

‘호남의 소금강’ 월출산 생태탐방원 조성사업 속도

내년 정부예산에 용역비 1억 2000만원 반영
영암군 “월출산 르네상스 열겠다” 유치 총력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국립공원 월출산의 생태탐방원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7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에 월출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 용역비 1억 2000만원이 반영됐다.

월출산의 우수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 생태복지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국립공원 월출산 생태탐방원 조성사업은 2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5만 7000

m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된다. 이 곳에는 교육관(4실)과 생활관(24실), 암벽등반장, 자연놀이터, 체험실 등이 들어선다.

현재 생태탐방원 후보지로 유력한 영암군은 그 동안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과의 행정적 협의를 바탕으로 서삼석 지역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과 함께 사업의 필요성 및 접근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또 군의회와 지역 언론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정부예산 반영에 힘을 모으는 등 월출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영암군은 월출산(1988년 국립공원 지정)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예부터 ‘월출산이 영암이고, 영암이 월출산’이라 기록되고 있는 명실상부한 월출산의 고장이기도 하다.

하늘 아래 첫 부처’라 불리는 국보 제144호 마애여래좌상, 국보 제50호 월출산 도갑사해탈문을 비롯해 월출산 명물 구름다리와 함께 이 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대중가요 영암아리랑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영암에는 전남 대표 휴양지인 월출산 기차랜드와 기차빛길, 월출산온천 등 다수의 관광지가 있다.

영암군은 월출산 국화축제, 월출산 유채꽃 축제 등 월출산을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축제와 마케팅도 활발히 전개하며 월출산의 명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11월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함께 지역생태관광 상상세미나 영암군 환경생태자산의 가치와 활용 방안을 개최하기도 했다.

또 민선 8기 들어 월출산의 다양한 생태자산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월출산 브랜드를 시도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월출산은 영암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생태탐방원이 국립공원 월출산 르네상스 시대의 서막을 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생태탐방원을 유치해 영암이 남도 역사문화, 생태관광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순천, 민선8기 생활 인구 확충... 지방소멸 극복
지역 넘나들며 교류·체류 인구 증가 지역 활력 총력

순천시가 민선8기 인구정책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더해 개인의 삶이 중요한 시대 트렌드에 맞는 웰빙, 건강, 행복이 특화된 도시 실현을 목표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나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출산장려시책을 확대하면서 출산율 제고 정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인구 늘리기에 몰두해 왔으나 인구절벽의 시대 흐름을 꺾지는 못했다.

순천시 또한 아직은 인구감소 지정지역은 아니지만 2020년 인구증가 정점을 지나 감소가 시작되었다. 읍면 단위 농촌지역은 이미 다른 군 단위 지자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경제활력, 보육환경, 청년정책, 농촌활력, 문화관광의 5대

키워드로 핵심 과제를 선정 ▶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 생활인구 확충 제도 기반 구축 ▶ 청년의 정착과 꿈을 응원하는 청년정책 강화 ▶ 고학사 랑기부제 첫 시행으로 지방재정 보충, 경제 활력 촉진 ▶ 도시공간 재구성, 농촌 정주여건 개선으로 수도권 인구 견인 ▶ 생태관광 자원으로 관계인구 1000만 도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아내려면 지역 간의 인구 경쟁이 아니라 환경·관광시스템, 광역 자원화 시설 등 지자체의 협력과 연대로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광역 메가시티 중심도시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준익 기자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웰니스관광지 4회 연속 선정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추천 웰니스 관광지’에 4회 연속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는 2017년부터 4회 연속 선정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지로 입지를 굳혔다.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관광지는 2년마다 한국관광공사의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관광공사는 웰니스 콘텐츠의 적정성, 홍보 마케팅 실적,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는 웰니스 관광지 연계추진 관광코스과 팸투어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자연·숲 치유 분야의 웰니스 관광지로 재지정 됐다. 특히, 순천만국가정원은 지난 22일 ‘2022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어 웰니스 관광지의 모태가 됐다.

‘추천 웰니스 관광지’에 선정된 관광지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한국관광공사와 전라남도의 홍보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광주~완도 1단계 고속도로 건설 내년 예산 1780억 확보
1단계 구간 공정률 68%... 2단계 구간 국정 과제 반영 등 추진 박차

완도군은 27일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1단계(광주~강진 구간) 건설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국비 178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완도군에 따르면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3조 3837억원을 투입해 총 연장 88.61km, 4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에는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1단계 건설사업비 1780

억원이 반영됐다.

지난 2017년 8월 착공한 광주 벽진동~강진 성천 간 1단계 구간은 현재 공정률이 68%이며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진 성천~해남 남향 간 2단계 구간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점 추진 노선으로 반영돼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완도에서 광주까지 소요 시간이

현재 2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되는 등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구간과는 별도로 2단계 구간도 해양치유산업과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국립해양수산물관 건립 등을 반영해 1단계 준공 전 착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장성 첫 ‘예산 6000억 대 시대’ 활짝... 6016억 확정

26일 추경예산안 논의회서 원안 가결... 2.3% 증가

장성군이 군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민선8기 공약인 ‘예산 6000억원 대 시대를 개척 이래 처음으로 달성했다.

27일 장성군에 따르면, 전남 장성군의회가 군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134억원을 원안 가결해, 2022년도 장성군 살림 규모는 당초 예산에서 2.3% 증가한 총 6016억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는 136억원 늘어나 5902억원에, 특별회계는 2억2000만원 감액된 114억원이다.

추경예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군은 농업해양수산 분야에 26억 4000만원을 편성했다.

분야별 예산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쌀 생산 농가 출하 장려금, 진원면 학전지구·북일면 성산지구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지원 등이다.

교통·물류 분야는 ‘삼서~광주 경계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에 5억원을 편성했다. 망암 변이중 화차 안내판 정비 등 문화·관광 분야에도 2억 4000만원을 반영했다.

산업·중소기업과 에너지 분야에

선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등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부흥2교 소교량 재가설사업 등 공공시설과 안전 분야에도 1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6억 2000만원을 비롯해, 거동 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 2000만원 등도 증액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군 최초로 예산 6000억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힘을 모은 장성군의회에 감사 드린다”면서 “예산 확보가 장성군 발전과 미래 희망 실현의 핵심 요소인 만큼, 앞으로 예산 1조원 시대’를 목표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심세희 기자

함평, 내년 국비 1814억 확보 성과
내교기각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등 63건 반영

함평군이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을 분야별로 두루 확보해 지역 현안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함평군은 27일 “군정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2023년도 정부예산 1,814억원(지역 현안사업 586억원, 정부 추진사업 122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총 63건(사업비 586억원)의 주요사업 중 신규사업은 24건 122억원, 계속사업은 39건 464억원이 각각 반영됐으며, 국고건의사업 이외에도 각종 공모사업이나 국고 보조사업 등을 감안하여 2023년도 국비예산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주요 국비사업은 분야별로 살펴보면,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석창항·월천항 어촌뉴딜 300사업(49억원) ▲함평만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4억원) 등이 반영돼 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더불어 잘 사는 어촌마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정부 추진사업으로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비(1,130억원) ▲함평-해보 국도 24호선 시설개량 사업(77억원) 등이다.

또한 2022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월야 농어촌도로 102호선 확포장(3억원) ▲노후교량 축밀교 외 2개교 보수보강사업(4억원) ▲학교 복원지구 양수장 설치사업(6억원) ▲손불 사기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9억원) 등 총 2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 국회 등에 적극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펼친 결과, 지역발전 현안사업의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케 됐다”며 “함평군의 미래 30년을 견인할 국고 지원 현안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2024년 국비 확보 대상 사업 또한 조기 발굴해 국고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함평=김은희 기자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전국 최우수 센터’ 선정

진도군은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2022년 전국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는 농촌진흥기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현장중심 농촌진흥사업 성과 향상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매년 선정·시상하고 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잡곡 신품종 재배 시범단지(16ha) 조성 후 잡곡 브랜드 가치 향상 기여, 과학영농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한 농산물 안전 분석실 등을 활발히 운영했다.

또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 정착을 위해 이열대 작목 육성 보급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한국농촌지도자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진도군과 전라남도의 농업·관광자원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앞으로도 진도군 농업인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농촌생활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현장 맞춤형 기술 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 박차

주민설명회 개최... 2024년 조성 완료 목표 승인 절차 진행

해남군이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26일 마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제2지구에 조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식품특화단지 제1지구가 100% 분양됨에 따라 지속적인 조성을 위한 기업 유치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제2지구 조성을 위한 관

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마산면 주민들을 비롯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 설명이 이뤄졌다.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 사업은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용전리 일원 약 21만8000m²(6

만6150평) 면적에 2024년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농촌복합산업화 농공단지로서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으로 구성해 해남군의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가공하는 특화단지조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기존 관습대로 유지·확장 및 진입도로 조성에 관한 의견, 공사 추진 중 소음·진동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 마련, 농공단지 내 녹지구역에 대한 활용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보성, 내년 지역 현안 국비 사업 2537억원 확보

인구소멸대응사업 168억·별교 여자만 갯벌복원 70억 원 등

보성군은 2023 정부정책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현안 총사업비 2537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확보한 내년 예산 주요 사업 사업비는 ▲별교 갯벌복원 70억 원 ▲해양보호구역관리 87억 원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정비 22억 원 ▲폐기물처리 시설확충 30억 원 ▲인구소멸대응사업 168억 원 등이다.

또 ▲별교~주암 간 국도 27호 확

장 287억 원 ▲경전선 고속 전철화 1084억 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354억 원 ▲군농영천 농어촌 하수도 정비 52억 원 ▲회천지구 관로정비 123억 원 ▲보성 관로정비 2단계 105억 원 ▲검백 용산-장수농어촌 하수도정비 46억 원 ▲가죽본노 공공처리시설 보완 3억 원 ▲태백산맥 문화투어 도로개설 50억 원 ▲기초생활 조성사업(검백·율어·조성)

56억 원 등이다.

보성군은 이번 국비 확보가 지역 인구 유출 방지와 함께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 권역별 균형개발 도약의 발판이 돼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1000만 관광 시대를 열어줄 경전선 전철화(광주충정→보성) 사업과 남해안고속철도(목포→보성) 사업비가 확보된만큼 보성군이 남해안 교통과 문화관광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성=장국도 기자

광양, 국토부 수소도시 조성사업 확정
내년 1월 실무추진단 구성·마스터플랜 수립

광양시는 지난 26일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올해 4월 국토부 사업설명회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라남도도와 여수광양항만공사,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기업체와 함께 분야별 수소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국토부에 제출했고,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사업대선지로 선정돼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고,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달 24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

수소도시란 도시 내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 등의 수소 생태계가 구축돼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를 말한다.

시는 수소도시 조성사업 선정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지난해 10월 광양시민의 날을 맞아 ‘2050수소경제 비전 선포식’을 통해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시민 앞에 선언했다.

올해 4월엔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12월엔 광양시 수소산업 유치·육성에 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시민과 기업체 관계자 안 교통과 문화관광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시에서 2023년부터 추진할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주거 분야는 광양읍에 들어서는 청년 행복주택과 생활동 다목적 스포츠센터(수영장)에 수소연료전지 설비를 구축해 전기와 운수를 생산 공급하고, 교통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출퇴근버스, 청소차 등을 연차적으로 수소차로 전환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수소 인프라 구축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수소충전소와 연료전지 발전소 및 광양항에 공급하기 위해 19km 수소배관을 매설할 계획이며, 수소도시 조성사업 내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통합운영센터, 시민에게 수소에너지 체험하고 안전성 확보에 대해 홍보할 홍보센터 등을 구축한다.

지역 특화사업으로는 항만 내 야드 트랙터와 항만 내 감시 기능을 하게 될 드론을 수소연료전지로 전환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광양읍, 금호동, 도이동 일원을 중심으로 2023~2026년(4년간) 추진하며, 사업비는 총 400억 원(국비 200억, 도비·시비 200억)이다. 광양시는 내년 1월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실무 추진단 구성, 마스터플랜(MP) 수립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조준익 기자